

전 고체 배터리 산업 선점 전략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고체 전해질 사용, 발화·폭발 현상 거의 없어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주도권 확보 위해 전 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 전제돼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8일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이차전지의 한계를 넘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고체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발화, 폭발 현상이 거의 없다. 분리와 냉각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와 에너지 밀도 향상에도 크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연구원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이차전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전 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0년 6,160만 달러에서 2027년 4억8,250만 달러로 연평균 34.2%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의 경우 전 고체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 고체 배터리를 주력 기술로 인식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고체 배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과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고, 전 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고체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 △전 고체 배터리 기반 확대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전 고체 배터리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고체 배터리 핵심 수요시장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R&D와 제조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과제 선정을 제안했다.

전 고체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투자자금 지원, 인적 확보, 세금공제, 사업화 지원 등의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 고체 배터리 수요에 기반한 인력공급체계와 지역 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고체 배터리 기반 확대를 위해 초격차 기술 연구, 글로벌·초광역 연계 인재양성, 기업지원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합한 핵심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고체 배터리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생태계 확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문안위 익산 수해복구 지원 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 삼기면 마을 일원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 위로하고, 피해복구에 일손을 보탬다.

문안위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이날 오전 익산지역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와 잔해물을 치우는 등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오후에는 익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산북천 지방하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극강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농가를 방문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수해복구 작업에 손을 보탬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민주, 익산 수해복구 현장서 '구슬땀'

이재명 전 대표 등 전당대회 후보자들, 지역 국회·광역·기초 의원들 동참 "수해민들께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 되길 바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극강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농가를 방문해 복구작업에 손을 보탬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원 등 250여명이 망성면 일원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지원활동은 심한 수해로 상처를 입은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이 한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기초 의원, 당원 등이 함께했다.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지수·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석

해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망성면 인근의 수박·상추 재배 시설 69동에 배치돼 물에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망가진 농기계, 농작물 잔해를 부지런히 바깥으로 날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오늘 지원활동이 상처를 입으신 수해민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멀리서부터 익산까지 복구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

의를 제치고 달려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모든 분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 시설 확충 등 확실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0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익산시 피해액은 지난 17일 기준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모두 더해 281억 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350%를 넘긴 것이다. 특히 사유 시설 피해의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오는 20일까지 누적 집계는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 2024년도 업무 추진상황 청취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제281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하반기 첫 정기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최종 선임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김제시 주요 사업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 내실 있는 효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전북자치도의회 경산건위, 도 기업유치지원실 등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제412회 임시회 기간 기업유치지원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3일 동안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누군가의 생색 내기용이 아닌 전북도에 내실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총지휘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은 1분기 파산신청이 439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 하는 등 파산신청이 역대 최고인데, 이는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며, 기업유치와 산업 육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닌, 버팀목에 돌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제공해 주길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정부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

고 있는지 묻고,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은 얼마 전 전주 페이퍼 노동자 사망 사건처럼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하는 청년노동자가 많은데, 현장방문이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와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은 5년간 지원되었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지원 사업이 24년으로 국비지원이 종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당장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향후 계획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후속 대체 사업을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올해 개교 유치원·학교 계획 정원에 크게 미달"

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올해 개교 학교들의 학생 충원율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 과대계상된 계획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18일, 전북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에 실린 2024년도 3월에 개교 사업계획과 올해 3월 개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원 충족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교한 곳은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이중 계획된 학급수와 학생수를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전주문정유



치원과 전주늘푸름유치원은 각각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34%(정원 148명, 현원 51명), 40%(정원 162명, 현원 66명)만의 정원을 충족했다."면서, "절반도 되지 않는 현원은 도교육청이 적기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음은 물론 여전히 변화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추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은 "향후 신설 학교를 설립할 때는 과대계상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시설을 설계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근로자 대상 브로커 차단해야"

김슬지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8일 대외국제소통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전북자치도의 확장적 외국인 정책과 관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류자격의 비자발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어 입국시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차질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 모집 등을 통해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없는 구조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도시와의 협약 증가에 대해서도, 단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리



를 찾을 수 있는 관계구축이 중요하다"며, 전북자치도가 해외 도시로부터 어떠한 실리를 얻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 속에서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14개 시·군에 6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현재 도시권에 소재해 있는 외국인지원센터 외에 각 시·군에도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 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김명지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전북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위한 체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에 해당하나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은 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몰개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



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6,000명 이상 순유출되었는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출향도민 관련 사업, 새롭게 재정비를"

이수진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



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매 건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로,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